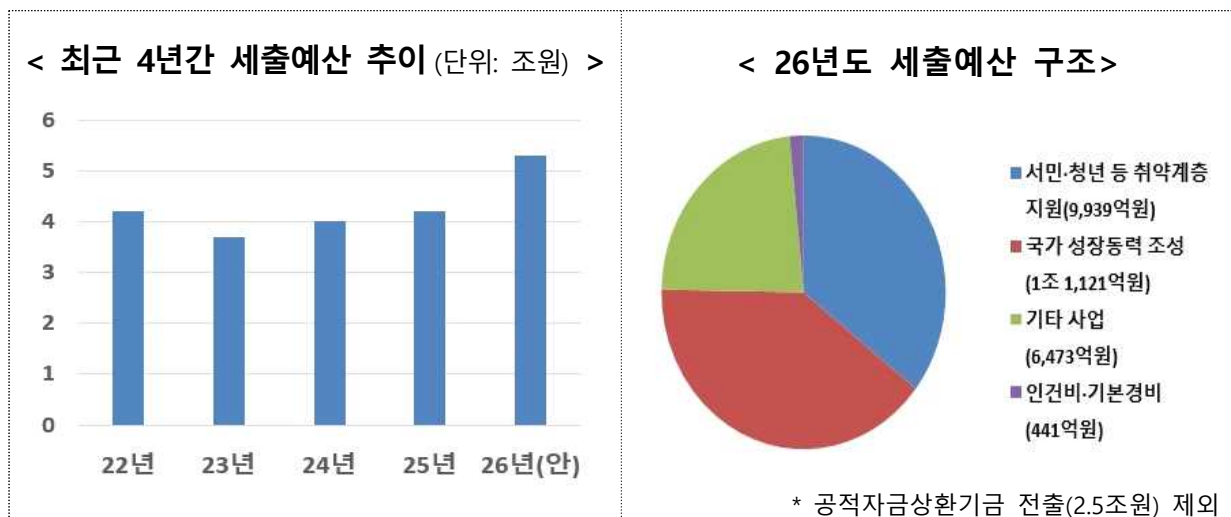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2,962억원** 편성
(‘25년 대비 **1조 1,124억원** 증가, +26.6%)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의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62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약 1조 1,124억원(+ 26.6%)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국민성장펀드^{신규} 등 1조 1,121억원)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신규}, 청년미래적금^{신규} 등 9,939억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



금융위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 2026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역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2100-2780)
		담당자	사무관	윤도현 (02-2100-2783)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핀테크지원사업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02-2100-2534)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송병관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강준모 (02-2100-2614)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6)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02-2100-1688)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02-2100-2513)

금융위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먼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국민성장펀드^{신규} (1조원)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규모)의 재원으로 재정 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이 마중물*로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조성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은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활용되어 민간자금의 사업참여 리스크 부담 경감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투자펀드 재원 1,0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핀테크지원사업 (121억원)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대국민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인식의 확산 및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핀테크의 스케일업(Scale-up)을 돕겠습니다.

2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다음으로,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청년미래적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신규} (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6년 정책서민금융 정부재정을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정부 출연금(일반회계 및 복권기금)과 금융권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을 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1년 6월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금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를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서민금융법 개정(‘21.6월)으로 새로이 서금원에 출연하게 된 금융회사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속적으로 신설*하다 보니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 예: 햇살론뱅크(은행 취급, ‘21.7월), 햇살론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 취급, ‘21.10월) 출시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불편 사례 >

- ①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도 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서금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서금원 보증료율 9.9% = 15.9%

- ②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금융 보증부대출 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합니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업권	全 업권		

상품통합 이후 ‘26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에 정부재정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투입하여 2.63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을 투입하여 2.33조원의 대출을,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하여 0.3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단위 : 억원) >

구분	'25년					'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공급규모	2,800	6,500 ¹⁾	11,100 ²⁾	3,000	23,400	23,300	3,000	26,300

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시 10,500억원

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2,200억원) 합산시 33,300억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지원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② 청년미래적금^{신규} (7,446억원)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26년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예산안 기준 청년미래적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납입금의 12%를 매칭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과도하게 오랜 기간 적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 범위는 추후 구체화

구체적인 금리, 운영방식 및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 등 세부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관계기관 및 금융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9.1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개선(SNS추심 지원, 신청양식 개선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금년 대비 약 7억원을 증액(+58.2%)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단위: 건): ('22) 4,510 → ('23) 3,249 → ('24) 3,096 → ('25.8.15일) 5,994

또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22일)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방지를 넘어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